



권영길 의원 - 정치자금 악법
이용 기소 시도



노회찬 의원 - 삼성파일 '떡값 검
사' 폭로로 기소



심상정 의원 - '한미FTA 문건 유출'
빌미로 조사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관련 기사 2면

비정규직 악법 시행

한미FTA 체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 G8 정상회담 평가

5면

우석균 칼럼
-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4면

존 몰리뉴 칼럼
- 옛 소련의 몰락
- 스탈린주의의 성격

8~9면



국제

- 러시아와 미국 갈등의 배경
- 남아공 1백만 명 파업
- 프랑스 총선 평가

6~7면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인터뷰

11면

“인용해도
될까요?”

“2002년에 ‘노무현 찍으라고 주변에 권고까지 했던 사람들’은 요즘 대개 술자리의 ‘죄인’이다. 고개를 잘 들지 못한다.”

— 〈한겨레〉 성한용 기자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 … 구체적인 예산 문제까지 전부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 대책없는 헛공약을 남발하는 이명박

“기획을 한 사람도 없고 연출한 사람도 없으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혹은 신이 있다면 신에 의해서 대통령의 큰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

— 열우당 의장 정세균

“평준화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주민들이 투표해서 마약을 끊을지 계속할지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주민투표로 평준화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이명박 · 박근혜 공약에 반발하는 〈조선일보〉

“비정규직 보호법에 차별 시정과 관련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회사는 7월 1일부터 그런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때문에 [아웃소싱과 대량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 뉴코아 관리담당 이사 김연배

“미국 내수용[뼈 있는 쇠고기]은 먹으면 안 되는 고기나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 한미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김중훈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을 막는 악법이 진정한 문제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영길 ·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언론노조 전임 지도부 일부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총선 때 언론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에게 모은 7천만 원 정도를 민주노동당 의원 서너 명에게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낸 조합비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오히려 이것을 가로막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악법이다.

기성 정치권은 총선 직전에 ‘노조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라는 정치자금법 개악을 통해 진보정당의 성장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당시 언론노조는 정치자금법을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언론노조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조합원들의 개인 후원인 양 꾸민 것이 세액 공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노동자 의원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정치자금법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불법’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민주노총 —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악법이야말로 없어야 한다

저질렀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조선일보〉의 비난은 역겹기 그지없다. 노동자들의 돈이 반노동자 정당에게 가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며, 온갖 비리와 부패에 연루돼 온 한나라당 · 열우당 · 조중동이야말로 ‘도덕성이 말살’된 자들이다.

한편, 현 언론노조 이준안 지도부가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도 없이 전임 지도부를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이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정말 유감스럽다.

언론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김미영 전 총무부장이 개인적으로 3억여 원을 횡령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임 지도부의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의 주요 결정과 회계감사를 현장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앞장선 민주노동당을 탄압해 기성 정치권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삼성 폭로를 ‘해킹’으로 몰아 이영순 의원을 기소한 것, 삼성 X파일과 ‘떡값 검사’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것, ‘한미FTA 문건 유출’을 핑계로 심상정 의원의 전화 · 팩스 내역을 뒤진 것 등이 그 사례다.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와 기소도 그 연장선에 있다. 결국 이런저런 빌미로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3명 모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정치자금법이 악법임을 주장하며, 힘을 모아 정면으로 탄압에 맞서야 한다.

강동훈

가좌역 지반 붕괴 사고

철도 사유화가 나를 비극을 예시하다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말부터 공사장 인근 건물들이 기울고 갈라지고 내려앉는 등 사고 조짐이 뚜렷했다.

그래서 가좌역 인근 주민들이 “버스만 지나가도 땅이 흔들[리고] … 창문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져 공사 담당자들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항의도 했지만” 이런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며칠 전에야 철도시설공단과 감리회사에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열차가 가좌역 구내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놔서 뿐 구체적 조치를 회피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겨우 4분 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가 사고 지점을 지나갔는데도 인명 피해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여기에는 사고 지점으로 다가오는 열차를 몸으로 막은 건설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분 뒤 땅이 무너져 내렸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근본 원인”이며 “안전을 무시한 상업적 운영을 지양”하고, “철로를 직접 유지 · 보수하는 현업 기관에 열차 운행 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각각 31명과 4명이 숨진 1999년 패딩턴역 열차 충돌 사고와 2000년 햇필드 열차 전복 사고도 철도 사유화가 낳은 비극이었다. 철도회사들이 수익성 때문에 안전을 위한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철도 사유화를 막고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 통제권을 갖게 해 더 끔찍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박종호

6월 10일 반전 집회 “정부는 철군 약속을 지켜라”

지난 6월 10일 서울역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긴급 반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사실상의 철군계획서인 임무종결계획서를 내놓기로 한 지난해 연말의 약속을 깨고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연장 등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긴급히 조직됐다.

집회가 겨우 일주일 전에 공지됐는데도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교협, 다함께, 학생 단체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쟁에 반대하는청소년들’, ‘경계를 넘어’ 등 약 4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의 연사들은 부시의 이라크 점령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석유 개발



6월 10일 열린 파병 재연장 반대 집회

권 운운하며 제국주의적 약탈에 동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6월 국회에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받아내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계를 넘어’ 활동가 미니 씨는 “이스라엘은 전에도 몇 차례

나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은 늘 이스라엘을 편들었다”며 “유엔군이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에 파병되는 것은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는 놔둔 채 강도가 든 집만 들쭉시는 꼴”이라고 레바논 파병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었다.

나는 “6월 항쟁의 진정한 계

승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반전 운동,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국가보안법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운동에 있다. 부시가 제시하는 ‘한국 모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라크와 한국에서 모두 미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역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정부가 약속한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철군 결의안 제출을 지원하고 임무종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군 요구 보고서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반전 시위도 열 것이다.

김광일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적 개악 동맹자들

노무현이 ‘반우파 개혁 지지층 결집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파와 손잡고 한미FTA를 추진하다가 생뚱맞게 말이다.

한미FTA 타결 이후, 바닥을 기던 노무현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다. 이것은 개혁 지지층이 다시 돌아와서가 아니었다. 그렇기는커녕 한미FTA 추진은 노무현 지지층 이탈을 가속시킨 주요 계기였다.

지지율 상승은 조중동과 심지어 김용갑·조갑제 같은 친미 우익 세력의 지지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들은 눈꼴시게 노무현을 칭송하며 FTA 추진에 힘을 보탰다.

노무현은 “입이 찌지려 한다”며 목에 힘주고 다녔지만 친미 우익의 귀여움만 받고 있어선 미래가 불투명했다. 그래서 ‘기자실 통합’ 문제로 조중동·한나라당과 편가르기를 시작했다.

많고 많은 ‘개혁 사기꾼’답게 노무현은 “시장 권력과 결탁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과 “독재자의 딸”을 비난했고 “민주주의”, “개혁”, “진보”를 들먹였다.

그러나 ‘늑대(조중동과 한나라당)가 나타났다’는 말에 사람들은 이제 시큰둥하다. 더구나 노무현은 한미FTA 추진에서 보여 줬듯이 ‘늑대와 손잡고 양을 잡아먹던 양치기 소년’ 아닌가. 실제로 진보 언론과 언론개혁운동 진영까지 노무현의 ‘기자실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노무현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몸이 달은 노무현은 정부와 조중동의 추악한 유착을 밝히기 시작했다. 몇억 원의 광고와 협찬으로 비판 기사를 막은 사례, 출입기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성접대하는 사례 등. 그러나 사람들의 분노는 조중동뿐 아니라 이런 더러운 유착의 파트너로서 사실을 은폐해 온 노무현 정부로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잃을 게 별로 없는 노무현은 ‘판을 흔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노무현의 입을 막고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적인 제도”다. 그러나 정치 중립을 어기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공무원노조를 탄압한 게 노무현이다.



일러스트 준

“야당·언론이 흔들어서 개혁을 못했다”고 하지만, 조중동·한나라당과 손잡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 노동법 개악 등을 추진해 온 게 노무현이다.

“지역주의 부활”을 비난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도에서 “재미를 봤”고 ‘영남특위’를 만들어 지역주의에 편승한 게 노무현이다.

따라서 노무현도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자다.

“쪽 팔린다”

노무현이 친미 우익을 비난하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분노와 역겨움만을 느낀다. 그래서 ‘범여권’의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는 계속 헛 돌고 있다.

‘범여권’에는 노무현과 함께 배신과 개악을 추진한 장본인들,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밀려난 손학규 등이 잡탕으로 섞여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지난 몇 달간 합종연횡하며 이른바

‘대통합’의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해 왔고 노무현에게서 “당신들 인기는 나보다 더 낮지 않느냐”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그래서 박상천·김한길은 대선은 포기한 채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지분을 이면합의하고 ‘소통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나머지 계파들은 ‘대통합’으로 급속히 나아가는 듯도 하다. 김근태는 “대통합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주도권 다툼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도로 열우당’을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통합”으로 봐줄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만약 ‘미래구상’과 일부 시민사회세력이 이런 기반적 ‘대통합’에 동참해서 ‘개혁적 외파’ 구실을 한다면 끝사납기 그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거침없는 위선적 막말을 은근히 반기고 있다. 신혼부부가 몇 쌍인지도 모르면서 ‘신혼부부 집 한 채’(이명박)를 공약했던 게 드러나는 등 정책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허점만 드러나는 한나라당에게 “반노무현 전선

이 가장 쉬운 필승 구도”(민주당 유종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노무현 전선’도 이명박·박근혜의 아귀다툼을 막지는 못했다. 박근혜 측이 ‘숨겨놓은 재산 1조 원, 외환 도피, 기자 성접대’가 담긴 ‘이명박 X파일’을 꺼내자, 이명박 측은 ‘육영재단·구국봉사단과 박근혜 측근이던 최태민 목사의 온갖 비리’를 담은 ‘박근혜 CD’를 꺼냈다. 결국 다시 ‘후보 검증(사실은 봉쇄·은폐위)’가 개입해 온갖 의혹·추문들을 서둘러 덮었다.

앞으로도 노무현은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한나라당은 ‘반노무현 전선’으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서로 싸우는 척하기에는 한미FTA 체결, 비정규직 악법 시행, 사학법·의료법·국민연금법 개악 등 협력할 과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

우리가 이처럼 “세계에 유례 없는 위선”적 개악 동맹자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쪽 팔리는” 일일 것이다.

전지윤

한미FTA 반대 운동 — 탄압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 건설에 매진하자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FTA의 재앙적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로 미국 담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뿐 아니라, 금연 운동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된 점과 부총리 권오규가 검역 완화를 지시한 사실 등이 폭로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최근 8명의 국회의원 이 추가 가입한 것도 이런 저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한미FTA 추진 ‘삼각동맹’인 노무현·한나라당·조중동의 추악한 아귀다툼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부시의 레임덕과 민주당·공화당의 분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따라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일부에 존재하는 비관적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확고한 한미FTA 반대 여론이 여전히 30퍼센트가 넘는다. 범국본은 협상 타결 이후 잠시 수그러든 한미FTA 저지 여론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반대 시위에 5만 명이 모인 후 반대 여론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을 기억해야 한다.

투쟁의 확대를 우려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거나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범국본 지도자들의 태도 —

아마 소환에 응하는 것이 갑작스런 체포·구금보다는 낫다는 실용주의 때문인 듯하다 — 는 잘못이다.

그러나 단지 집회 참가 사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서 운동 참가를 꺼리게 될 수 있다. 범국본 지도부가 이런 문제를 방관하면 경찰과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다. 이미 2백여 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인데 말이다.

검찰이 ‘FTA 문건 유출’을 빌미로 심상정 의원 등의 전화·팩스 내역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범국본은 침묵하지 말고 단호한 규탄과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노동 지도부는 “FTA 저지에 앞장서겠다”던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한미FTA 반대 집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동원하지 않고 회의에도 불참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6월 말 체결과 그 이후 국회 비준을 앞두고 더 넓고 더 강력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굳건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정구

6월 29일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궐기의 날
※ 시간과 장소는 추후공지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6월 항쟁 20주년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필자도 “만감이 교차”한다. 당시 날마다 다음날 쓸 “빠라”를 만들던 필자는 6월 내내 시위가 계속되자 유인물 초안에 “오늘도 거리 투쟁은 계속됐다”고 첫 문장을 시작한 적이 있다.

선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오늘도’라니? 투쟁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도’ 계속됐다고?” 할 말이 없었고 첫 문장은 “투쟁이 더 확산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오늘도”는 몇 달이나 계속돼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내가 살고 있던 공단도 파업 물결에 휩쓸렸다.

그 해 여름, 출근길의 여성 노동자들이 “니네 공장도 데모했니? 요즘 데모 안 하면 병신이라” 하면서 공장으로 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그 공단의 공장이 모두 파업을 했고 10명 미만 규모의 이른바 ‘마찌꼬바’까지 파업을 했다. 이런 노동자와 민중의 직접적인 참여로 지금의 민주주의나마 이루어졌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6월은 그렇다.

그런데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올해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6·10 민주항쟁을 승리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그 증거로 “이후 20년 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관치경제(틀) 청산하고 완전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됐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1987년 이후 정부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정부들에 대항한 꾸준한 투쟁 때문이었다. 더욱이 “완전한 시장경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바로 그 “완전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미FTA에 대해, 6월 항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범국민운동본부”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시장경제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자. 정부는 이를 미국이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협정문에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 그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이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 조치를 단 한 번밖에 사



6월 항쟁을 계승한 것은 허세욱 열사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지 노무현이 아니다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투 선수에게 시합 도중 가드는 한 번만 울리는 게 말이나 되나?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당장 신약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간다. ‘왜 이런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고 묻지 마시라. 정부 개입 없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6월 항쟁의 계승이란단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한미FTA 협정은 곳곳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누구에 대한 투명성인가? 예를 들어 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의약품 가격 결정 위원회는 그 회의록도 비공개다. 그런데도 이미 제약회사의 개입은 노골적이다. 제약회사가 ‘김앤장’[한국 최대의 법률회사]에게 약값 결정 과정을 맡기는 데 쓰는 공식 가격이 3~5억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약값이 ‘잘 나온다’는 것이 제약업체의 ‘상식’이다.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자? 기



업 개입을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다.

한미FTA 협정의 곳곳에 강조된 ‘투명성’이란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에게 아예 합법적인 민주주의 파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이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제 정책은 비밀 작전처럼 시행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아예 미국 정부나 기업과 정책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아예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FTA가 말하는 민주주의다.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한미FTA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 기구인 WTO나 FTA는 “각 국가의 국회 결정이나 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창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WTO의 분쟁 조정 기구이고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기업정부 직접 소송제’를 규정했다.

한미FTA의 미국 정부 민간자문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따낸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 대한 찬양, 더 나아가 아무런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자본들의 주문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다.

허세욱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에 택시노동자가 된 허세욱 씨는 그의 유서에서 “한미FTA 토론한 적 없다”며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상여금 13만 2백50원을 포함해 70만 6천4백28원이었다. 철거민 투쟁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허세욱, “16년간 지각도 결근도 없이” 노동을 했던 이 땅의 모든 허세욱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6월 항쟁 20주년인 오늘, 이 정권은 민중의 투쟁 성과인 지금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미FTA가 6월 항쟁의 계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허세욱 씨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그리고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한미FTA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협상”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는 오직 거리와 공장에서 민중의 직접적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6월 항쟁의 교훈이다. “오늘도”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항쟁의 계절, 6월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하일리겐담 G8 정상회담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독일 판 <선>[영국의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빌트>는 지난주 G8 정상회담이 끝날 때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미스 월드”로 불렀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기는 어렵다.

나는 정상회담 장소인 하일리겐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로슈토크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는 G8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청년 시위대로 꽉 차 있었다.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시위대가 정상회담장 부근 경찰의 대대적인 작전을 압도하고 도로 봉쇄에 성공했음을 시인해야 했다. “하일리겐담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의 시위 금지를 무시한 시위대 때문에 각국 정상 수백 명은 보트와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회담의 결정 사항은 그 회담 자체가 설정한 매우 낮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치스런 것이었다. 토니 블레어의 정신 나간 아프리카 순방[지난 5월 말]은 G8이 아프리카 개발 원조를 연간 5백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2005년 글렌이글스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러는 것이었다.

G8 정상들이 글렌이글스를 떠나자마자 G8 정부들은 그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 이제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이 끝났으니 G8은 5백억 달러 목표에서 2백20억 달러를 삭감할지도 모른다.

세계개발운동[영국의 국제 구호 단체]이 지적했듯이, “G8은 기존의 원조 약속을 새롭고 거창한 발표로 포장하는 데 명수들이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에이즈 치료 기금 목표액 6백억 달러에서 신규 원조 금액은 겨우 30억 달러뿐이다.

옥스팜 같은 주류 NGO들의 비판을 반박하며 글렌이글스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옹호했던 밥 켈도프[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가수]조차 하일리겐담 정상회담을 “완전한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메르켈은 G8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하기를 원했다.

수치스런

이 목표가 메르켈이 공언한 목표 —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 를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온실가스 방출을 80~90퍼센트 감축해야 하고, 2030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지 W 부시는 그런 목표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정상회담 전에 부시는 기후 변화를 다룰 새로운 협상을 유엔의 틀 밖에서 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기

후 변화 대처 방안 논의 전체를 망치려 했다. 점차 불쌍한 인물이 돼 가는 블레어(한 러시아 관리는 경멸조로 블레어를 “전직 총리”라고 불렀다)는 물론 부시의 제안을 돌파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부시의 계획은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짓이었다.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중국·인도 등 1997년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국가들의 카르텔을 결성해서, 아무리 불충분한 온실가스 방출 감축 목표라도 채택을 거부하자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대기업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의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서 영국 최고경영자들의 절반 이상이 기후 변화 문제를 우선순위의 맨 아래에 놓았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같은 문제들을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하일리겐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메

8명의 선진국 정상들에 항의하는 10만 명의 시위대

르켈이 제안한] 절반 감축 목표 채택을 좌절시켰다. G8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계획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지구가 계속 불타게 내버려두는 데 기꺼이 찬성한 부시와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푸틴은 다른 전선에서도 불을 지폈다.

푸틴은 러시아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판매해 벌어들인 엄청난 이윤으로 이제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지배 계급을 대표한다. 그는 폴란드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는 자신의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중동부 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나토와 유럽연합을 통해 서방 주도 안보·경제 체제로 끌어들이었다. 부시는 이번 주에 불가리아와 알바니아를 방문해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봉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러시아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그 대응 조치를 취할 만한 자신이 있다. [물론] 지금의 충돌 양상은 결코 신냉전의 시작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푸틴은 MD가 폴란드의 강경 우파 정부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폴란드와 나머지 EU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는 결코 도전받지 않았던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반길 일인지는 지난주 G8의 파렴치하고 우스꽝스런 짓거리들이 잘 보여 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이고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등 많은 책을 썼다.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제주도지사 김태환은 새 해군기지 후보지로 제주도 강정 마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강정 마을이 찬성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론조사 전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양해각서(안)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짜고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제주도청의 태도는 몹시 의심스럽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여론조사 결과의 원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면접원 조사로 여론조사를 하고도 계약서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 원이나 사용하고도 그 용처조차 분명히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비용 유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김태환과 국방부가 이렇듯 온갖 의혹을 무릅쓰면서까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한미동맹 관계를 보았을 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군비 경쟁

다행스럽게도, 해군기지 추진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있다.

제주도 내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군기지반대제주도민대책위’를 꾸려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시작했고, 제주도 내 천주교 성당이 모두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종교단체들도 이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가세했다. 지난 6월 7일 제주도 출신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6월 9일 열린 ‘6월항쟁 정신 계승 평화대행진’에서는 삼영교통지회 소속 운수노동자, 공공서비스 노조와 의료연대노조 노동자, 오리엔탈호텔 노동자 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3백50여 명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제주도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군비 경쟁 강화’와 ‘전략적 유연성’에 맞선 더 광범한 전국적 운동 건설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영



‘여론’은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MD 체제 무력화를 겨냥한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부활?

[편집자]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이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면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라며 “핵 충돌”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북한과 이란을 핑계로 한 미국의 MD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러시아 측이 지적하듯 “북한과 이란은 미국이 요격해야 할 정도의 로켓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대결 양상은 G8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레이더 기지 공동 사용”을 전격 제안하며 잠시 주춤는 듯했지만, 미국은 동유럽 지역 MD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푸틴의 제안을 거부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MD 갈등 이면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무능력자 취급을 받던 러시아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쟁과 축적의 핵심 동역학인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가 반영돼 있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7년 1월 호에 실린 피트 글라타의 글이다. 피트 글라타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이고 올버햄튼대학교 상경대학의 명예 연구교수이고, 소책자 <1905년 — 예행 총연습>(1905: The Great Dress Rehearsal) 등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다룬 글을 많이 썼다. 독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번역 · 게재한다.

옛 소련 몰락 이후의 러시아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왜 러시아는 많은 주변국들을 지배할 필요를 느끼는가? 그리고 러시아는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관계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온갖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옛 KG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독살, 탐사 전문 기자 안나 폴랴트코프스카야 암살, 그루지야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위협, 이 달 초 벨로루시에 대한 석유 수출 중단과 유럽 대부분 지역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 결정 등등, 이런 사건들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다시 의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은 여러 해 동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지지했다. 1999년 총리로 임명된 직후 푸틴은 체첸 독립 투쟁 전사들의 국경 침범과 일련의 “테러” 공격 — 체첸 투사들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아주 희박한 — 을 핑계로 아만적인 대(對) 체첸 전쟁을 재개했다.

국가의 수호자라는 새로운 이미지 덕분에 푸틴은 몇 달 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었다. 그는 체첸 주둔 러시아 군대가 전투적 이슬람에 맞서 싸우는 유럽의 최전선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취약한 러시아 국가 구조를 쇄신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민주적 권리들 — 옛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인들이 획득한 — 이 희생됐다. 서방과 특히 토니 블레어는 푸틴의 선거운동을 지지했고 체첸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했다.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모순적인 체제다.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높은 수준의 협력에 의존한다. 심지어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과 국가들 간의 협력에도 의존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근본적 동력이 끊임없이 작동한다.

그래서 오늘날 푸틴에 대한 서방 지도자들의 태도는 6년 전만큼 열렬하지 않다. 그들은 체첸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전쟁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쉬쉬한다. 그들은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줄지어 대기 중인 러시아 기업들한테서 거리낌없이 거액을 받는다.

서방 권력자들은 푸틴이 러시아 국가 구조를 복구하

려고 애쓰는 것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러시아가 위험한 경쟁의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방은 리트비넨코 독살을 이용해 푸틴에 대한 새로운 강경 노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서방이 푸틴을 비난하는 목록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비난은 요컨대 다음과 같다.

2000년 대통령 취임 이래 푸틴은 올리가르키 — 1990년대에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 덕분에 백만장자들이 된 자들 — 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경제와 산업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재확립했다. 푸틴은 국가 관료들 중앙집권화했고 많은 언론을 정부 통제 아래 두었다.

확장 정책

푸틴 정부는 반(反)서방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장을 부추기고 국제 무대에서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이 이 새로운 정책의 증거다. 따라서 [서방의 비난인즉] 푸틴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됐고,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옛 소련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푸틴을 비난하는 목록들이 전 세계의 많은 서방 동맹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서방의 푸틴 비난은 꽤나 그럴싸하다. 그러나 러시아 자본주의의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다.

첫째, 그런 비난은 푸틴의 성공 정도를 과대평가한다. 둘째, 러시아 자본가 계급의 소수파인 친(親)서방 올리가르키 탄압은 사실 러시아 자본주의 전체에 유리한 것

이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 전체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 자본가로서 엄청난 돈을 모으는 것과 민간 자본가로서 그렇게 하는 것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 두 부분의 자본가들은 모두 자유시장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들과 환경을 무제한으로 착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서방의 푸틴 비난은 러시아의 변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조금만 진지하게 조사해 보면, 그런 변화의 동기가 서방 자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푸틴이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에 옐친의 러시아는 지배계급 안팎의 소수 특권층의 내분으로 유명했다. 이것은 주로 통치 구조의 핵심에 있던 위계 집단인 옛 소련 공산당이 느닷없이 붕괴한 탓이었다.

푸틴이 집권했을 때는 러시아의 안정적 위계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에 대한 상류층의 합의가 점차 커지고 있을 때였다. 이런 의미에서 푸틴은 서방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의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자동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방의 평론가들은 러시아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치솟은 유가와 다른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크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푸틴은 경제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중앙집권화를 시작했다.

다른 설명들은 “러시아의 정치 문화”나 “옛 소련의 유산”, 특히 옛 소련 보안경찰인 KGB와 푸틴의 연관 등을 들먹인다.

이 관점들은 모두 국제적

그림을 무시한다. 사실, 결정적 자극은 러시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왔다. 1990년대 말 이후 서방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할 때 점차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 처음에는 세르비아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 그 뒤에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러시아는 이 세 곳 모두에 경제적 ·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꺼림칙하게도 러시아 국경선에서 가깝다. 지금 [미국이] 이란 —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 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때문에 러시아와 서방의 이해관계 충돌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겨울 이미지

세르비아 ·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러시아 지배계급은 너무 취약해서 자신의 세력권이 침범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적 도전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군사적 도전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국내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했다는 신호가 아니었다.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 실적은 멕시코 · 루마니아 · 자메이카보다 더 낮지 않다. 러시아는 여전히 취약하고, 따라서 쉽게 타격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주로 천연자원 생산에 집중돼 있고, 이것은 진정한 발전을 뜻하는 경제적 다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경우는 세계가 얼마나 더 불안정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위기에 취약해졌는지도 보여 준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노린 것은 유가 상승으로 푸틴이 득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푸틴은 러시아의 석유 호황으로 러시아 노동자들이 그 호황의 과실을 더 많이 나눠 달라는 전투적 요구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권력자들에게 기층의 반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러시아의 영속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모두에게도 단연 가장 중요하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6퍼센트 임금 인상 제안에 항의해 12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중이다. 그 동안 집권당의 인상안은 남아공의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 4만 2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생각한 다. 한 병원 노동자는 “우리가 선출해

엄청나게 늘어 받았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에 압력을 가해 다시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그루지야의 친서방 정부를 굴복시켰다.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오랜 영토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음에도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극동 지방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의 지배권이 로열더치셀[영국-네덜란드계 석유 다국적기업]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독점기업인 가즈프롬으로 넘어갔고, 영국과 러시아의 석유 합작 사업체인 BP-TNK에서 BP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2006년 말에 미국은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기적 타협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방이 푸틴에게 부드러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서방 자본주의의 목표는 러시아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러시아를 더 고분고분한 탐원으로 만들고 통합하는 것이다.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 실적은 멕시코 · 루마니아 · 자메이카보다 더 낮지 않다. 러시아는 여전히 취약하고, 따라서 쉽게 타격받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주로 천연자원 생산에 집중돼 있고, 이것은 진정한 발전을 뜻하는 경제적 다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경우는 세계가 얼마나 더 불안정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위기에 취약해졌는지도 보여 준다.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노린 것은 유가 상승으로 푸틴이 득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푸틴은 러시아의 석유 호황으로 러시아 노동자들이 그 호황의 과실을 더 많이 나눠 달라는 전투적 요구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권력자들에게 기층의 반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러시아의 영속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모두에게도 단연 가장 중요하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6퍼센트 임금 인상 제안에 항의해 12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중이다. 그 동안 집권당의 인상안은 남아공의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 4만 2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생각한 다. 한 병원 노동자는 “우리가 선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거대한 파업이 남아공을 뒤흔들다

공공부문 노동자 1백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 종식 이후 최대 파업 물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치의 위기에 빠뜨렸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6퍼센트 임금 인상 제안에 항의해 12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중이다. 그 동안 집권당의 인상안은 남아공의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 4만 2천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생각한 다. 한 병원 노동자는 “우리가 선출해

준 정부가 우리의 뜻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사투(COSATU: 남아공노동조합연합)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집권당이 된 아프리카국민회의(ANC)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ANC는 대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COSATU 지도부는 계속된 배신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에 밀려 정부에 맞선 행동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최초로 ANC와 공개적으로 맞선 사례다.

이것은 ANC 진영 내부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ANC의 연

속 집권을 보장해 온 남아프리카공산당 · COSATU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주에 정부는 겨우 6.5퍼센트 인상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협상 대표는 “기업의 매력을 끌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장들의 연봉은 68퍼센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연봉은 50퍼센트가 올랐다.

분노한 노동자들의 압력으로 코사투 지도부는 이번 수요일(6월 13일)에 파업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외신종합

프랑스 총선

우익이 승리했지만 급진좌파도 선전했다

주류 언론들은 사르코지가 이끄는 대중운동연합(UMP)의 승리를 프랑스 대중의 보수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건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먼저, 이번 총선의 기권율은 거의 40퍼센트에 달했고 UMP는 투표자 가운데 39.59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2002년 총선 1차투표 결과와 비교해 UMP는 6퍼센트를 더 얻었지만 이것은 기존 좌파 지지자의 보수화 때문이 아니라 르펜의 국민전선(FN) 지지 표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FN 득표율은 11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급감했다.

6월 17일 2차투표에서 UMP가 압도 다수의 의석을 얻는다면 그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당을 포함한 전체 좌파 정당의 총 득표율은 38.97퍼센트였는데, 이는 2002년 득표율(38.9퍼센트)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프랑수아 베이루의 프랑스 민주동맹-민주운동(UDF-MoDem)

등 중도 성향 정당이 약 10퍼센트를 득표했다.

결국 UMP를 포함한 우파와 극우 진영은 유권자의 40퍼센트 정도가 기권한 가운데 50퍼센트를 약간 넘는 표를 얻었다. 따라서 “우파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사실 사회당은 지난 25년 간 각종 선거에서 20~30퍼센트를 득표했고 이번에도 24.7퍼센트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2002년보다 득표수는 약 4만 표가 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두드러진 것은 사회당을 뺀 좌파 정당들이 14.24퍼센트를 얻은 것이다. 이는 2002년 총선 1차투표나 올 대선 1차투표 때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비록 공산당의 득표율은 4.1퍼센트로 지도부의 기대에 못 미쳤고 2002년보다 10만 표를 잃었지만 공산당의 이번 후퇴는 트로츠키주의 정당 혁명은 2002년 득표율(38.9퍼센트)과 거의 일치한다.

LCR과 LO는 합쳐서 3.41퍼센트(88만 7천8백87표)를 얻었다. 이는

이번 대선 1차투표 득표율보다 낮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들의 총선 득표율은 대선 득표율보다 낮았다. 이들은 LCR이 새로운 득표를 주도하면서 2002년 총선 1차투표 때보다 약 26만 5천표를 더 얻었다. 일부 급진좌파를 중심으로 프랑스 대중의 급진화는 계속 진행중인 것이다.

사르코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국민 다수가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에 각종 선거에서 UMP에 패배를 안기고, UMP 정부의 유럽헌법과 최초고용계약법(CPE)을 좌절시킨 대중 운동은 순순히 사르코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국민이] 사르코지 집권당에 압도적[으로] 개혁[을] 위임”(연합뉴스)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치가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대다수 언론의 전망은 설부른 것이다. 프랑스 정치는 더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용욱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옛 소련은 왜 몰락했는가?

[편집자] 지난 호 지면 부족으로 몰리뉴 칼럼을 실지 못했습니다. 주제의 연관성을 고려해 두 편의 글을 함께 실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비록 사회에서 소수파일지라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러시아 혁명은 또, 정치 조직 형태인 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전 세계에 선보이기도 했다. 이 소비에트를 통해 노동계급이 실제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음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20년 뒤인 1937년의 러시아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배한다는 점말고는 맑스의 사회주의 개념이나 1917년 혁명의 목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회가 돼 있었다.

1937년의 러시아는 무소불위의 독재자 스탈린이 보안경찰 등 막강한 국가 기구를 이용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 사회에서는 자유·논쟁·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리 하찮은 이견이라도 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노동계급은 혹독한 빈곤 속에 살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노동자들을 방어할 진정한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않았다. 많은 농민들은 최근에야 기근과 기아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크게 감소했던 불평등이 이제 급증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배자들·관리자들·관료들은 축재에 여념이 없었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반(反)국가 범죄로 처벌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분명히, 이 질문의 대답에 아주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특히, 지금 21세기에 사회주의 혁명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대답에 달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다른 대답들을 먼저 살펴보자.

스탈린

두 주요 집단 — 서방 지배계급들과 그 이데올로그들과 스탈린주의자들 — 은 [러시아 혁명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방 부르주아의 견해는 노동 대중이 본래 사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 권력, 자유, 평등에 대한 얘기는 모두 백일몽일 뿐이고, 독재와 폭정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 노력의 의식적 목표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견해는 1930년대의 소련이 진정한 사회주의의 구현체이자 맑스·레닌 사상의 구현체이고, 폭정이나 경찰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부르주아지의 선전일 뿐이라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견해는 첫째, 노동계급

에 대한 편견과 둘째,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사상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다. 이 연재 칼럼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의 견해는 사실에 대한 무지나 부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탈린주의의 견해는 진정한 혁명가들의 증언(예컨대 빅토르 세르주의 《어느 혁명가의 회고》를 보시오)을 비롯해 산더미 같은 증언과 목격자 진술에 의해, 무엇보다 역사에 의해 논박당했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이른바 사회주의 나라들이 정말로 노동 대중을 위한 약속의 땅이었다면, 1989~91년에 이들 나라의 노동계급이 자국 정권을 지키기 위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 정권들이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옛 소련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로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 — 스탈린·레닌·볼셰비키당 — 의 성격과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다. 1956년에 흐루시초프는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의 ‘비밀 연설’에서 스탈린 시대의 범죄들을 비난했다. 그는 스탈린 주위에서 발전한 ‘우상 숭배’와 스탈린의

내전 중 백군에 붙잡혀 처형당하기 직전의 적군
— 내전 기간에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학살당했다.

가학적 성격을 비난했다. 우상 숭배와 가학성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 왜 우상 숭배가 발전했고, 왜 공산당은 가학적 괴물을 지도자로 세우고 계속 떠받들었는가?

서구 학자들이 선호하는 주된 설명은 레닌주의와 볼셰비즘의 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인즉 전체주의적인 볼셰비키당으로 구현된 레닌 개인과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성격이 스탈린주의의 만행을 낳은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러시아 혁명 전과 혁명 기간, 혁명 직후 볼셰비키당이 매우 민주적이었다는 사실과 스탈린이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고참 볼셰비키들을 거의 모두 물리적 으로 제거해야 했다는 사실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모두 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설명들은 모두 이른바 부르주아적 ‘위인’ 사관의 변형들이다. 이런 ‘위인’ 사관은 무엇보다 극소수 위인들(흔히 왕이나 장군 들이지만, 옛 소련의 경우에는 맑스주의 이론가들과 활

동가들)의 사상과 행동이 역사를 좌우한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보다 계급들 간의 투쟁이고 이 계급투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느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의 운명에도 이런 역사유물론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문제는 1917년 10월에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이 어떻게 그 권력을 잃게 됐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나면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첫째, 러시아의 경제 발전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보다 후진적이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도시 노동계급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였다. 이 자체가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지만(그렇다면 1917년 10월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급의 위치가 처음에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역사유물론

둘째, 혁명 뒤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러시아에 개입해서 벌어진 1918~21년의 내전 기간에 러시아 경제가 철저히 파괴됐다. 이 파괴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 공업 생산은 1913년 수준의 21퍼센트로 하락했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교통이 마비됐고, 콜레라와 결핵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고, 기근이 만연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토대가 파괴됐다. 게다가 내전 기간에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학살당했다. 1917년에 권력을 장악한 계급이 1921년쯤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더는 자신의 집단적 의지를 사회에 관철할 수 없었다.

노동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회 세력이 지배권을 장악해야 했다. 보통은 귀족이나 부르주아지가 그렇게 했을 테지만,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뒤였다. 따라서 점점 더 대중의 통제를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히던 국가·당 관료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혁명은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됐다. 국제 혁명은 특히 독일에서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실패했고, 그 결과 혁명 이후 경제 재건과 노동계급의 부흥과 재충전에 필요한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 자본주의의 엄청난 경제적·군사적 압력을 받게 됐다.

인간 본성 또는 이른바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결함이 아니라 이 실제의 물질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러시아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고 스탈린주의를 낳은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정확한 성격은 다음 칼럼에서 다룰 것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

스탈린주의의 성격

스탈린주의는 1930~40년대 옛 소련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적절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 시절의 절대 지배자였기 때문이고 둘째, 그 용어[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일반과 옛 소련 체제를, 그리고 레닌 생전의 소비에트 권력과 소련 체제를 적절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만으로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가 득세한 사회의 경제적·사회적·계급적 성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경제적 동역학은 무엇이었는가? 서방 자본주의의 동역학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나, 다른 것이었나?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계급 분열 사회였나, 계급 없는 사회였나, 아니면 계급 없는 사회로 전환중인 과도기 사회였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에 계급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계급들이었나? 또, 지배계급은 누구였나?

이런 물음들은 모두 서로 연결돼 있고 사실은 하나의 물음, 즉 옛 소련 사회의 계급적 성격이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은 60년 넘게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 문제는 러시아 자체, 그 비슷한 “공산권”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든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옛 소련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부를 자처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지도력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옛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한참 뒤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역사적인 이유로 일부 스탈린주의·반(半)스탈린주의 체제들, 특히 북한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핵심 문제와 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

옛 소련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크게 네 가지 입장이 나왔다. 첫째, 옛 소련은 사회주의였다. 둘째, 퇴보한 노동자 국가였다. 셋째,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관료적 집산주의였다. 넷째, 국가자본주의였다.

첫째 입장이 단연 가장 흔했다. 주류 “공산주의자들”,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 우파가 모두 이런 견해를 공유했다. 그래서 이 견해가 “상식”이 됐다. 그러나 이 견해는 또, 가장 해악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 견해를 가진 좌파들은 흔히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고, 근본적으로 이 견해는 사회주의의 핵심이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나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단지 재산의 국가 소유일 뿐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파가 이 견해에 동

소련 국가자본주의론을 정립한 토니 클리프는 스탈린(사진 오른쪽)을 정점으로 한 소련 관료들을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의 자본의 인격화”라고 불렀다

의한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 국가를 어쨌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똑같은 것이라고 떠들어대면 대중이 사회주의를 불신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퇴보한 노동자 국가론은 트로츠키나 정설과 트로츠키주의와 관계 있다. 이 입장은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러시아 혁명의 목표를 배신했고 옛 소련의 사회주의적 발전과 국제 노동자 혁명에 대해 적대적인 반혁명 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치 혁명으로 스탈린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국유화된 소유관계를 근거로 소련 경제가 탈(脫)자본주의 경제이고, 따라서 스탈린주의 러시아는 세계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 노동자 국가이므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입장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스탈린주의 반대와 서방 자본주의 반대를 결합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과 사회주의를 분리시킬 여지를 남겼다는 약점도 있었다.

관료 집산주의론은 트로츠키주의 운동 안에서 노동자 국가론에 반대한 사람들(특히, 미국의 막스 샤프트만)이 처음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뒤 다양한 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입장은 국가 소유가 사회주의나 노동자 국가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국가 소유는 자본주의의 폐지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소련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라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이 새로운 생산양식의 경제적 동역학이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관료 집산주의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관료 집산주의” 사회들이 자본주의보다 더 진보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혼란이 생겼고, 그래서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우파로 변모했다. 이들은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로 미국 제국주의를 지지하기까지 했다.

스탈린주의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입장은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비롯한 좌익 반대파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가장 일관된 국가자본주의론은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가 1940년대 말에 발전시킨 것이다. 클리프의 출발점은 스탈린주의가 동유럽(과 북한)에서 노동자 혁명 없이도 적군(소련 군대)을 동원해 사회주의나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 주었다

면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을 주장한 맑스의 근본 사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국가 소유라는 기준과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가운데 선택해야 했을 때,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가운데 선택해야 했을 때 클리프는 과감하게 후자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클리프는 소유관계를 넘어서, 소유형태의 근저에 있는 실제의 생산관계를 주목할 수 있었다. 국가 소유 문제에 대해서, 클리프는 다양한 사회에서 국가 소유가 존재했고, 맑스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어느 계급이 국가를 소유하거나 통제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옛 소련 경제의 실제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극소수가 생산수단을 지배했고, 대다수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착취당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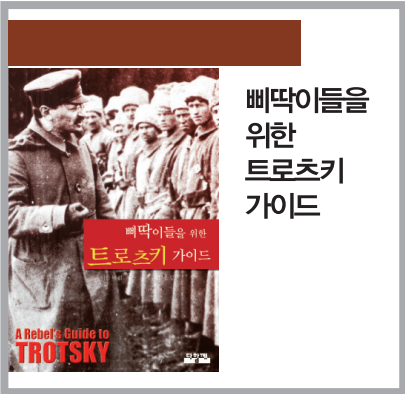
소유관계와 생산관계

클리프는 또, 스탈린주의 러시아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고 세계 경제의 맥락 속에서 보면 소련이 계획경제였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일국사회주의”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조건, 즉 자본 축적이라는 조건에서 서방 자본주의와의 경쟁에 뛰어들어 있었고, 따라서 산 노동(노동자들)을 죽은 노동(자본)에 무자비하게 종속시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맑스가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에서 분석한 자본주의의 근본 특징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맑스의 맑스주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론일 뿐 아니라, 시간과 사건의 시험을 가장 잘 견뎌낸 입장이기도 하다. 1989~91년 공산주의의 몰락은 더 우월하고 더 진보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주의 나라들이 서방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패배했음을 입증했다. 그것은 이들 나라의 노동계급이 자국 국가를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국가에 전혀 충성하지 않았음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옛 스탈린주의 관료들이 대부분 권력을 잃지 않고 국가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 단지 “옆걸음질”친 것은 두 체제 사이에 근본적 차이, 즉 계급적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맑스주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전이고, 20세기와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변혁하는 투쟁을 지속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폐쇄적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하 '실용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 급증, 동성애 등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한국 사회가 “민족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민족문화 전통을 홀대”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다. 심지어 자본주의와 함께 국민국가가 형성된 초기에조차 다른 민족·인종 성원의 이주를 지금처럼 끔찍하게 규제하지는 않았다.

단일 민족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도 일제 식민지 억압 시절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동성애도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 신라 시대 화랑에 대한 기록에



서 '동성애 코드'가 발견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런 관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오늘날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다. 현재 한국에는 4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9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다. 결혼 이민자가 7만 5천 명을 넘고, 국제결혼 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만 지속돼도 20년 뒤엔 이민 2세가 거의 1백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 가족과 친척, 이웃, 직장 동료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차 위선적이거나 다문화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성과 민족문화 고수는 너무 배타적일 뿐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우파 정치인·언론이 이주노동자와 성적 소수자들을 속죄양 삼아 공격할 때, '실용주의' 필자 같은 관점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상품·자본 등의 이동은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자·난민의 이동은 점점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그래서 이주자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에 제대로 맞서려면,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 민중의 단결을 꾀하고 투쟁을 고무할 수 있는 국제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맛불> 47호를 읽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

YTN 뉴스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에도 구청에 들러 퇴근 도장을 찍고 가는 장면을 방영했을 때, 그들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청장이 수당을 반납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고 따라서 수당 삭감과 일괄 반납을 반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수 있었다.

진정한 혈세 빼먹기는 누가 하고 있는가. 진짜 혈세 도둑은 파병과 점령

지원에 돈을 쓰는 정부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세를 인하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백은진

‘대량해고를 저지한 뉴코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동영상으로 김스클럽 강남점의 노동자들이 사측이 투입한 용역깡패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 노동자 중 한 명이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10년을 일

하고 찢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웃으며 계산을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고객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이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이 아웃소식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내일이, 미래가 없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정말이지 더럽고 추잡한 ‘상도덕’ 위반과 노동 탄압을 일삼은 이랜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뉴코아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반드시 박성수의 탄압을 박살내야 한다.

김태현

지역사회 포럼

서울 동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전지운(주간 <맛불> 공동 편집자)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3층(건대역 6번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연사: 전지운(주간 <맛불> 공동 편집자) 장소: 토즈(신촌역 3번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서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45분	서울 중부 기업 세계화와 식품 위기 일시: 6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연사: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사연대' 편집국장)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한성대입구역 7번출구 동소문우체국 5층)	인천 환경 재앙 —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장호중(주간 <맛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교육실 문의: 010-3083-5508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편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인터뷰

“승리의 길은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있습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7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아웃소싱, 용역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뉴코아 · 이랜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10일 공동 파업을 했고 6월 15일 이후 2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랜드에서 벌어지는 만행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던 노무현의 거짓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이랜드 노동자들은 정규직 ·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다.

뉴코아 · 이랜드 일반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지난해 까르푸(현재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18개월 이상 일한 직원은 해고하지 않겠다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최근 21개월 근무한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을 해고했어요. 또 전국에서 5백여 명 이상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비정규직 계약 기간도 처음 12개월에서 10개월, 6개월, 3개월, 1개월, 일주일[로 계속 줄어더니] 이제는 아예 백지 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대부분 간접고용으로 전환(외주화)시켜 임금도 깎고 노동조건도 더 열악해지고 있어요.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도 연봉이 1천5백만 원밖에 안되고, 비정규직은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랜드 계열사인 뉴코아도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 대량해고뿐 아니라 정규직

도 전환배치해서 해고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얼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이랜드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에 맞선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랜드노조는 2000년~2001년 투쟁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노동조합으로 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해 왔어요. 뉴코아노조는 최근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하려는 이랜드 자본을 보면서 비정규직 다음 차례가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3백5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노조에 직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랜드 일반노조만 2백여 명의 신규 조합원이 생겼어요.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예전 같으면 1년 미만 비정규직은 해고될까 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3개월밖에 안 된 직원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랜드 조합원들은 경험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요.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비정규직 복지 등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거든요.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는 이랜드 · 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

대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예요.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투쟁은 9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투쟁입니다. 지금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6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

하면 유통 부문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줄 겁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사장들도 함부로 못하겠지요.

또,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대량해고를 막아낸다면 9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겁니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의 투쟁을 지지 · 암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 정리 최영준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지난 5월 법원은 한국외대 보직교수들의 직원 폭행 · 성희롱을 고발한 조명훈 동지를 무기정학 징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외대 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주일 만에 2백만 원 가까이 모금됐다

교수 · 학생 · 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이에 더해, 외대 당국은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학교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보직교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성희롱을 저

지른 교수가 직접 나서 징계 철회 요구 대자보를 학생들 앞에서 찢어 불태우기까지 했다.

학교 당국의 ‘화풀이식’ 항소로 항소 재판 비용 2백만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하는 조명훈 동지는, 조명훈학우징계철회대책위(이하 징계대책위) 소속 학생회 활동가 등과 함께 강의실을 돌며 모금을 호소했다.

사범대 학생회장과 중국어과 학생회장은 지지 호소 글을 써주었고, 교수들은 기꺼이 수업 시작을 미루고 발언 기회를 줬다. 학생들은 학생회장들의 모금 호소와 박노자 교수의 징계 철회 메시지가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읽고는 앞다투어 모금함에 돈

을 넣었다. “마음 같아서는 백만 원을 넣고 싶다”며 더 많은 돈을 못내는 걸 안타까워하는 학생도 있었다. 선뜻 모금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모금 참여를 독려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직원 노동자들도 모금을 하며 격려해 주었고, 87년 6월 항쟁 20주년 행사에 참가한 졸업생들도 모금에 참여했다.

조명훈 동지와 징계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큼 뜨거운 호응이었다. 첫날 하루에만 20만 원 넘게 모금됐다. 남궁연 초청 강연에서는 강연 시작 전 조명훈 동지가 모금 호소 발언을 하자 그 자리에서만만 65만 원이 걸렸다. 약 일주일 동안, 2백만 원이

모였다.

조명훈 동지가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것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일주일 간의 모금 운동에 쏟아진 뜨거운 지지가 보여 주듯이, 학내 구성원 다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라는 학교 당국의 거짓말을 믿지 않고 있다.

조명훈 동지와 징계대책위는 징계 철회를 바라는 외대 교수 · 학생 · 직원 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승주

조명훈 동지 항소 재판 비용 후원 계좌 제
일은행 132-20-661393 여승주

6월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7월 시행을 앞둔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확대·양산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악랄한 비정규직 해고의 선두에 선 뉴코아 이사 김연배는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과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뻔뻔스레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관리자도 "비정규 법이 시행되면... 무기계약으로 할 직군, 2년마다 교체[해고]할 직군, 외주화할 직군 등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고, 노조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연봉제와 성과급을 통한 '합리적 차별'은 언제나 가능하며, 원청은 파견 근로자 차별에 책임도 없다.

차별시정을 신청해도 최종 판결까지는 5~10년이 걸리며 승산도 거의 없다. 차별을 자행한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권영길 의원은 이것이 "사용자의 차별시정 회피를 돕는 안내서"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정규직 공격이 결국 정규직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흠에버는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서 정규직 전환배치를 들고 나왔고, 뉴코아 관리자는 노골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타겟"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재앙인 한미FTA 체결도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길 것이다. 최근 완성차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도 한미FTA가 낳을 결과를 미리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은 자기네 조합원들에게 굴러들어오는 복을 건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파업을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파



6월 9일 민주노총 총력 투쟁 선포대회 - 악랄한 배신적 반노동자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업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비난도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치적 문제를 놓고 파업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타겟

그 밖에도 노동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공격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로지 돈 위에 올려놓는"(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악, 노동자들의 노후를 팽개치는 국민연금법 개악, 비리 사학재단을 위한 사학법 개악, 최저임금 동결 시도 등이 그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교조의 총력 투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준비되고 있다.

6월 9일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 선포대회'에는 이처럼 투쟁하는 노동자들 3천여 명이 참가해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을 결집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석행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6월 9일 집회 때도 이석행 위원장은 "실천 행동이 부족하다"며 참가한 노동자들을 책망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처럼 '중앙 지도부는 투지가 충만한데 각 산별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가 요즘 이석행 지도부의 '설정'인 듯하다.

물론 일부 산별노조·대형노조 지도부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파업은 자제하고 어떤 경우라도 대화하겠다"며 장관들을 만나러 다니며 투쟁보다 협상테이블 마련에 치중해 왔던 건 이석행 지도부였다.

이제나마 "온건한 사람이 계속 온건할 수는 없다"며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6월 2일 한미FTA 반대 집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던 노동자대회를 1주일 뒤로 연기하고, 6월 9일 집회에서 거리행진도 잡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

6월 5일 '총력 투쟁과 파업'을 선포한 직후에 노동부 장관 이상수에 이어서 노무현과도 비공개 면담을 하며 협상에 연연한 것도 부적절했다. 노무현은 이석행 위원장에게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뻔한 말만 늘어놓

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측의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노무현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정부는 갑자기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악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민주노총의 뒤통수를 쳤다. 이석행 위원장은 "대통령이 면전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허탈해 했다. 지금은 이 악랄한 배신적 반노동자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만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단호한 전면파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보여주는 이랜드·뉴코아 공동 파업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이랜드·뉴코아 노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가입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듭 쟁취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의 지적처럼 비정규직 악법은 "수많은 비정규직 투사들도 함께 만들어"냈다.

이 같은 단호한 투쟁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로 6월 투쟁의 승리를 열어가야 한다.

정종남·전지윤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2007은 5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주제>>>

■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듣는다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말한다 ■ 2·13 합의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 부시의 전쟁과 세계 반전 운동 ■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 돌아온 전략 문제 - 사회주의자들과 운동 ■ 신자유주의 시대,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치경제학 ■ 냉전 이후 북한, 어디로 가는가? ■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미래인가? ■ 일본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화에 맞선 투쟁 ...

참가비 하루 9,000원 / 나흘 30,000원

할인 가격: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하루 4,000원 / 나흘 13,000원
대학생, 실업자: 하루 6,000원 / 나흘 20,000원

맑시즘 2007

주요 연사>>>

린지 저먼 |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영국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
존 리즈 | 영국의 급진좌파 정당 '리스펙트' 사무총장
문성현 |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태인 |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이강택 | KBS PD
민세원 |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
정성진 |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 저자
유달승 |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7월 14일(토) - 7월 17일(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다함께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맑시즘'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